

광주시·광주경찰청 국감 현장

“전남 저수지 5곳 중 1곳 농업용수로서 부적합”

“5+2정책 호남 단체장 한 목소리 내야”

전남도청 별관 철거 문제 상호 협력 필요
강절도·교통사고 발생률 높은 이유는



최병민 광주지방경찰청장이 21일 광주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조진형·한나라당)의 광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조진형·한나라당)의 21일 광주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5+2 광역경제권 사업',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의 적자운영 문제, 201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유치 관련 예산공개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 7월 개청 이후 줄지 않고 있는 강·절도 등 5대 범죄와 높은 교통사고 발생률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데 앞장서 뵈으면 한다”고 적극 대응을 당부했다. 이무영(무소속) 의원은 “5+2 정책에서 호남권이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광주시와 전남도, 전북도 등 3개 단체장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수도 조성사업=문화수도 조성사업의 ‘엔진’인 문화전당이 ‘적자전당’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범래(한나라당) 의원은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용역 보고서를 인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에 매년 1천억원 이상의 운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전당 내 시설물의 적절한 운영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적자는 불 보듯 뻔하다”고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김성조(한나라당) 의원은 “아시아 문화전당 부지내 옛 전남도청 별관 철거문제가 제대로 결정되지 않을 경우 예산지원 등이 곤란해질 수 있다”며 우려했고, 이윤석(무소속) 의원은 “별관 철거 반대 접거농성으로 전당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광주시, 5월 단체가 적

극적으로 생각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하계 U대회= 최규식(민주당) 의원은 “대회 유치전략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며 “U대회 유치를 반대하는 의견을 겸허하게 듣고 수용하는 자세가 있어야 대회 유치가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유철(한나라당) 의원은 “총 예산 102억원을 들여서 27표 중 6표를 얻는데 그쳤다”며 “사용 예산의 세부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광태 시장은 “6표밖에

못얻었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추측·비하일 뿐이며, 광주를 지지한 국가들에게도 모독이 될 수 있다”며 “여수와 경창, 대구, 부산 등에서도 많은 국제행사를 유치했지만 그곳에서는 예산(공개)과 관련된 말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방경찰청 최병민 청장은 “경찰의 임무는 범죄 예방과 치안 유지를 위한 것”이라며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의 노력은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병민 청장은 “경찰의 임무는 범죄 예방과 치안 유지를 위한 것”이라며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의 노력은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지방경찰청

최병민(민주당) 의원은 “최근 1년간(2007년 7월~2008년 8월) 인구대비 5대 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발생 상위 20개 경찰서 중 광주

지방경찰청 관할 경찰서 동부·서부·북부 등 3곳이 포함돼 다른 광역시에 비해 높았다”면서 “5대 범죄 검거율에서도 62%로 울산지방경찰청(56%)에 이어 꼴찌에서 두 번째였다”고 치안 불안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병민 광주청장은 “절도 전담 수사반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잠문처리 우려가 있는 금은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절도 사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윤영기·최권일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광역시

◇5+2 광역경제권=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정책을 집중 성토하는 한편, 광주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최인기(민주당) 의원은 “5+2 경제권 사업은 영남과 호남의 발전에 차이를 두는 것으로, 정부는 이같은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지역발전에 대한 철학과 기조를 바꿔야 한다”며 “국회에 이 정책의 수정을 위해 모임을 가질 예정인 만큼 박광태 광주 시장이 ‘광역경제권 정책’을 무력화

못했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추측·비하일 뿐이며, 광주를 지지한 국가들에게도 모독이 될 수 있다”며 “여수와 경창, 대구, 부산 등에서도 많은 국제행사를 유치했지만 그곳에서는 예산(공개)과 관련된 말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방경찰청 최병민 청장은 “경찰의 임무는 범죄 예방과 치안 유지를 위한 것”이라며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의 노력은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병민 청장은 “경찰의 임무는 범죄 예방과 치안 유지를 위한 것”이라며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의 노력은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광주경찰청 국감 이모저모

○국회의원 3선에 광역단체장 재선의 관록을 자랑하던 박광태 광주시장이 이날 국감에서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 유치와 관련된 의원들의 잇따른 추궁에 ‘음소 전략’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박 시장은 “다른 도시들이 국제대회 유치를 지자제들이 너무 경쟁적으로 나서서 것 같다”고 지적하자 “광주가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또 박 시장은 “다른 도시들이 국제대회 유치를 내칠 때는 가만히 있더니 왜 광주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를 삼는 지 모르겠다”며 섭섭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광주시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생일날 국감 하게 돼 미안” 격려금 전달

○이용삼(민주당) 의원은 이날 광주시 국정감사에서 “광주가 이렇게 많은 사업을 다 하면 다른 지역은 무슨 사업을 하겠나?”라며 광주시의 방대한(?) 사업에 대한 부러움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이 의원은 “광주시가 자동차, 항공, 의료, 디지털, 디자인, 나노 사업 등을 어떻게 발전시킬 지 걱정된다”며 “지자체들이 균형 발전을 하려면 중복되는 건 없나 비교해서 양보

도 하고 줄이기도 해서 좀 나눠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민주노동당 광주시당은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시에 대한 국감에서 광주시의 201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실패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시당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장인 광주 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지방감사는 자치단체의 실패 파악과 문제점 등을 해소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U대회 유치과정과 예산집행 내역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일 광주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는 시종일관 ‘화기에 예’한 분위기로 진행돼 국감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국감날이 ‘경찰의 날’과 겹친 것을 의식해서인지 의원들은 피감기관에 대한 ‘질타’보다는 격려와 칭찬, 예로사한 정취 등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특히 조진형(한나라당)위원장은 국감 시작 앞서 “생일날 격려와 위로를 받아야 하는데 국감을 하게 돼 미안하다”면서 최병민 청장을 불러내 격려금까지 전달하고 의원들은 박수로 격려했다. /윤영기·최권일기자 penfoot@kwangju.co.kr

■국회 농식품위 국감 “개보수 필요” 38%

전남 등 남부지방의 가뭄이 심각한 상황에서 농업용 저수지의 오염까지 심각해 농작물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조진래, 여상규 의원이 21일 배포한 한국농촌공사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이후 최근까지 3개월여 동안 전남도의 평균 강수량은 161mm로 평년(1971~2000년 평균치) 554mm의 29%에 그치고 있다. 때문에 농업용수 저수율도 43.8%로 평년(70.3%)보다 26.5%포인트 낮아 물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더욱이 농업용 저수지의 오염이 심각해 농촌공사가 지난해 조사한 전남 지역(광주 1곳 포함) 74개 저수지 중 21.6%인 16곳의 수질이 농업용수수질 기준(Ⅳ: 화학적 산소요구량 8.0 mg/L 이하)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즉 5곳 중 1개 저수지 물은 농업용수로서 부적합한 상태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농촌공사 자료에 따르면 도덕·신덕·감둔·대정·영광 오동·수동·장흥 지정·덕촌·소포담·진도

농업·광주 지정·고흥 봉암·내봉·월천·둔전·연봉2 저수지 등은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힘들 정도로 오염돼 있었다. 상황이 이런 데도 농촌공사는 올 상반기까지 전남에서만 9건에 1억5천 200여만원 어치, 전국적으로 69건에 76억8천500만원 어치의 농업용수를 타당도로 판매하고 있다고 조 의원은 밝혔다. 지난 2004년부터 5년 가까이 타당도로 판매한 농업용수는 359건에 648억8천900만원어치나 됐다. 또 저수지와 방조제 등 수리시설 안전성도 취약해 재난으로 인한 물부족을 더욱 부채질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농촌공사가 지난 2006~2007년 전국 506개소의 수리시설의 안전도를 조사한 결과, 29.6%인 150곳(저수지 140곳)이 긴급 개보수가 필요한 D등급 시설이었다. 가뭄이 심각한 전남의 경우 전체 117곳 중 38.4%인 45개 시설이 D등급이었으며 이중 저수지는 44개나 됐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가뭄이 내년 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권역별 연결수로 계획을 재검토하고 농업용수 수질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장기 가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73억 들여 지하수 개발·저수지 준설

전남도 가뭄대책 추진

전남도는 가뭄이 장기화됨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 73억원을 투입, 지하수 개발과 저수지 준설 등 가뭄 대비책을 추진키로 했다. 전남도는 21일 가뭄이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는 예비비 사용을 검토하고, 중앙부처에 건의한 가뭄대책비 505억원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도는 우선 이미 확보한 국비 31억원을 무안과 보성, 강진, 영암, 고흥 등 발작물 피해가 많은 지역의 지하수 개발 및 유류비 지원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또 보성과 강진 등 가뭄이 심한 지역에 저수지 준설을 위해 지방비 42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식수가 고갈된 여주시 삼일동 소치마을 등 4개 시·군 16개 마을(598세대)에 선박 등을 이용해 하루 1차레 운반급수를 실시하고 있

다. 또 광양시 봉강면 구서마을 등 7개 시·군 69개 마을(5천354세대)에 대해서는 제한급수를 실시중이다. 한편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수부 국무총리 주재로 가뭄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금년도 예비비 등 약 1천250억원을 투입, 지하수 개발과 저수지 준설 등 가뭄 대비책을 추진키로 했다. 가뭄장기화 대책으로 우선 환경부는 식수원 확보 차원에서 265개 지하수를 개발하고 총연장 54km 규모의 송수관을 설치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총 220억원의 예비비를 투입키로 했다. 또 농림수산식품부는 366개 지하수 개발, 35개 양수장 설치 및 보강, 1천523개 관정 관리 등에 내년도 예산 230억원을 연초에 조기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3 Jo-i' (3조이) featuring various property listings with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a large image of a house and a table of property details.